

로마 G20 정상회의, ‘국민권익위 등 범국가적 반부패 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

- ▲ 부패 신고 시스템 ▲ 통합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
▲ 기관 간 협력 체계 우수성 인정받아 -

(2021. 11. 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가 G20정상회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10월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 측정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Measurement of Corruption)’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고자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구 「부패방지법」과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고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 공공조달 ▲ 공공행정 투명성 ▲ 선물과 금품 등록 ▲ 정치 기부금 ▲ 금융정보교환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올해 3월에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분류, 신고 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모범사례라고 한 G20의 평가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어 20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역대 최고 순위”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5년 연속 개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 -*

(2021. 11. 26., 국민권익위)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최근 발표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100점 만점에 21점, 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에 이어 올해 21위로 5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뇌물 위험도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 매우 낮음(18개국), 낮음(35개국), 보통(81개국), 높음(49개국), 매우 높음(11개국)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는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공동 개발했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이며, 델파이 기법 개발 및 계획기반예산(PPBS) 제안 등 행정·경영관리 및 사회조사 연구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 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며, “이런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해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의 반부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평가주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와 CPI 등 국제 부패평가의 한계와 보완점을 논의하고 개선해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향상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와 적극 소통

- 이번 달 8~9일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기구 직접 찾아가
반부패 정책성과 설명 -

(2021. 11. 2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가청렴도는 “공공 분야에 존재하는 해당 국가의 부패 수준”으로 서울대학교 산업협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의 필수적 요건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운영,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청탁금지법 개정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측은 최근 G20 회의 등을 비롯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 분야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으며, 한국의 사례를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확산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와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그간의 지속적 반부패 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기조를 통해 하루 속히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반열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반부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에 한국의 선진 부패공익신고시스템 “청렴포털” 소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주개발은행(IDB) 공동주관 회의에서
“청렴포털” 우수사례 발표, 중남미 국가 대상 기술지원 등 협력방안
논의 -

(2021. 11. 18., 국민권익위)

한국의 디지털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
국제사회에서 또 한번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미주개발은행(IDB)*이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 청렴성 그리고
참여”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의 특별분과에서 “청렴
포털”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 미주개발은행 : 중남미지역 역내 자유무역촉진과 기술협력지원을 위해 설립
된 미주지역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제임스 P. 스크리븐(James P. Scriven) IDB 인베스트
회장(예정),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의장 및
콜롬비아, 칠레, 페루 감사원장 등 총 28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 중남미 권역 외 국가로서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온라인 부패공익신고시스템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한국의 부패예방 및 통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청렴포털 운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중남미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의 노하우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회의가 우수한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운영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해 주요안건 논의

- 협회 회원가입 심사, 예산안 및 지역보조금 심의, 명예종신회원 승인 등 -

(2021. 11. 15.,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오후 7시(비엔나 기준 오전 11시) 비엔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 이사회에 참석해 IOI 회원가입심사, 예산안 및 지역보조금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이번 이사회 참석은 당선 이후 두 번째 이사회 참석이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IOI)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 세계 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120개국 212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 및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총회(4년 주기) 및 이사회(매년) 개최

* 옴부즈만(Ombudsman) : 스웨덴어로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 등의 의미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에서 유래됨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요안건은 ▲ IOI 회원가입신청 심사 ▲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 지역보조금 신청현황 심의 등으로, 미국·영국·호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20개국 옴부즈만이 참석해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IOI 설립목적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명예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옴부즈만이자 IOI 유럽지역 이사인 피터 틴달(Peter Tyndall)'을 IOI 명예종신회원으로 승인하는 안건도 논의했다.

피터 틴달(Peter Tyndall) 이사는 전 IOI 회장직을 역임했고, 오랜 기간 IOI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옴부즈만의 인권·굿 거버넌스·법치주의 증진 및 보호 역할'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로가 고려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IOI 이사로서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 기관들이 협회 내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정책 개도국에 전파**

*- 4일 온라인 성과보고회 베트남·우즈벡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도입 성과 및 교훈 공유 -*

(2021. 11. 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정책공유 사업(지속가능 개발목표 파트너십)의 성과와 교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4일 오후 8시(미동부시 오전 7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현지화 및 확산하는 업무협약을 UNDP와 2015년 체결하고 해당년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반부패정책 공유사업을 시행해 왔다.

베트남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해당 국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권익위와 UNDP가 지속 지원해 왔다.

* 부패방지시책평가 :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

참고로 2021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는 ▲베트남 ▲몰도바 ▲미얀마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알제리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UNDP와 협력해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권익위-UNDP-베트남·우즈베키스탄 각 사업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의 운영경험과 성과 및 교훈을 서로 나누기 위한 자리이다.

UNDP 사라 리스터(Sarah Lister) 거버넌스 국장, 앤 유프너(Ar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을 비롯해 베트남 검찰원,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의 고위급 공직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UNDP와의 반부패정책공유사업의 성과와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최신 반부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각인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청렴정책 지원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코트디부아르 부패척결부 장관에게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 소개

- 공공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설명 -

(2021. 11. 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로 비 발로(Zoro Bi Ballo)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부정부패 척결·역량강화부(이하 부패척결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제도를 소개하며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올해 부패척결부를 신설해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부패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조로 비 발로 장관은 올해 대한민국-코트디부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부패척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를 방문한 조로 비 발로 장관에게 UN, OECD, G20 등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제도를 소개했다.

조로 비 발로 장관 코트디부아르 부패척결부 장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부패척결과 굿거버넌스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같은 우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경험을 코트디부아르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지난 3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 분류, 신고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정책설명회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관세청도 함께 참석해 디지털 행정과 디지털 관세에 대한 정책 설명도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코트디부아르가 부패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디지털 행정의 경험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주신 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코트디부아르를 초청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 간 부패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경찰 음부즈만 · 주한 외국기업 음부즈만 신규 위촉

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적 역할 수행

(2021. 11. 2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경찰 수사·단속·교통행정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과 주한 외국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에 겪는 고충과 불공정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 위해 경찰 음부즈만과 주한 외국기업 음부즈만을 각각 신규 위촉했다.

먼저 경찰 음부즈만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겸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위촉됐다. 최정묵 경찰 음부즈만은 수사·단속·교통행정 등 경찰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한 외국기업 음부즈만에는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패방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기업고충 민원 등을 관할하는 소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음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신고·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이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음부즈만들이 경찰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과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행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상담: 국번없이 110
-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 팩스: 044-200-7971
-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

- △ 전자우편(email) : acrc@korea.kr
- △ 전화:044-200-7154
- △ 운영절차:

